

매립장 5년후 동나 쓰레기대란 예고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80% 이상이 5년안에 사용이 완료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과 예산부족으로 입지확보가 어려워 2000년대 초 쓰레기대란이 우려된다.

또한 60% 가까운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양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월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에서 사용중인 4백96개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백4개(61.3%)가 1~3년안에 사용이 종료되고 1백4개(20.9%)는 4~5년안에 사용이 끝나는 등 4백8개(82.2%)가 5년안에 사용이 완료될 것으로 집계됐다.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은 모두 34개(6.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백 96개 매립장 가운데 침출수가 처리되는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은 57.7%인 2백86개에 불과해 소규모 매립장을 비롯한 나머지 매립장은 침출수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침출수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매립장 밑바닥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차수시설)을 갖춘 매립지는 47% 2백34개소에 불과해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매립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4백96개 매립장 가운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매

립장은 1백44개소에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3백52개(71%)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미승인 매립지 비율을 보면 충남이 90%로 가장 높고 ▲ 경북과 강원 각 87% ▲ 전남 78% ▲ 인천 60% ▲ 경기 56% ▲ 제주 42% ▲ 충북 39% ▲ 전북 30% 순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지자체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입지확보곤란과 예산부족 등으로 단기간(주로 2~3년) 내에 사용이 끝나는 소규모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이 승인을 받지 않거나 위생적으로 설치, 관리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시설과 행정관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따라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환경부 고윤화 폐기물시설과장은 "우선 승인을 받지 않은 매립장중 승인절차 이행이 가능한 87개소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고 위생매립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매립장을 오는 2001년까지 모두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2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절반을 배출하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입수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95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만2천38t이며 이 가운데 미국의 배출량이 5천2백28t으로 23.7%를 차지, 1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 중국 3천6t(13.6%) ▲ 러시아 1천5백48t(7.0%) ▲ 일본 1천1백52t(5.3%) ▲ 독일 8백84t(4.0%) ▲ 인도 8백3t(3.6%) ▲ 영국 5백65t(2.6%) ▲ 캐나다 4백71t(2.1%) ▲ 우크라이나 4백31t(2.0%) ▲ 이탈리아 4백24t(1.9%) ▲ 프랑스 3백62t(1.6%)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3백53t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1.6%를 차지, 프랑스에 이어 배출량이 12번째로 많은 국가로 평가됐다. 이 통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음달 일본 교토에서 1백7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기후변화협약회의를 앞두고 IEA가 발표한 이 자료는 2000년대에 적용될 구속력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정하는 이번 회의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무공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교토회의에서 결정될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선발 개도국들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최선발 개도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무공은 지적했다.

환경보전이 경제발전보다 중요

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경제발

전보다는 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상당수가 환경규제 실효성이 낮으며 정부의 환경정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김종기)이 지난 9월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국민 1천5백명과 2백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기업 의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개별방문에 의해 면접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느낀 체감환경오염도를 보면 94.2%(작년은 89.8%)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부문별 심각도는 수질오염 94.9%, 쓰레기처리문제 93.9%, 대기오염 92.1%, 자연녹지 생태계파괴 87.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중 77.7%는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87.1%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의사가 있으며 93.1%는 환경오염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가 악화된 후의 환경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37.6%는 우선 순위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2.3%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더 높여야 된다. 26.5%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환경정책의 우선 순위를 낮춰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더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21세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난해 33.7%가 깨끗한 환경을 꼽은 반면 올해에는 35.5%가 경제적

풍요(작년 25.0%)를 들었고 깨끗한 환경은 30.7%에 그쳤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분야로는 54.9%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37.1%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8.1%는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등을 들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65.8%가 불만족을 표시했고 34.2%만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정부의 환경규제 실효성에 대해 77.9%가 낮다고 대답했다.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해 35.7%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60.2%는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의 규제강화에 대해 54.9%는 당장은 어려워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환경노력에 대해 70.2%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내 기업의 환경보전 수준은 나제점수(50점)를 기준으로 할때 평균 58.8점에 그쳐 낮은 평가를 내렸다.

또 조사대상 기업들도 체감환경오염도가 환경문제 전반적으로 91.2%가 심각하다고 대답해 국민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48.8%, 정부 39.6%라고 각각 대답한 반면 11.6%만 기업에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환경정책 강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4.4%는 투자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답한 반면 30.4%는 비용 부담은 있으나 부정적인 요인이 안된다, 29.2%는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된다, 6.4%는 환경정책의 강

화는 경쟁력과 무관하다고 각각 대답했다.

굴뚝 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대폭 확충

공장 굴뚝에서 24시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여천공단과 울산 온산공단에서 실시중인 대기오염자동감시체계를 앞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12월 5일 밝혔다.

대기오염자동측정체계(굴뚝자동측정기)란 대형 배출업소의 굴뚝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의 오염도자료를 해당 시·도에서 수집한후 통신망을 통해 지방환경청으로 보내 실 시간(리얼 타임)마다 지방청에서 대기오염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89개 사업장(2백62개 굴뚝)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시스템을 오는 2000년까지 전국 2천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에서 보낸 전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는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상황에 따라 경고발령, 공장조업단축, 조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

접 단속인원을 보내 조사해오던 대기오염단속을 앞으로는 지방청에서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으며 따라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난 심화 G-7과제 포기업체 늘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21세기 국가환경기술을 선도해 갈 국책사업인 선도기술개발(G-7) 과제를 포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속사업으로 정부가 선정한 환경부 G-7 연구과제 64개 사업 가운데 최근들어 기아자동차가 능동형 소음저감장치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모두 4개 업체가 사업 포기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자체 예산을 들여 전체 연구비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G-7 연구과제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힌 업체가 발생한 것은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G-7 연구과제 평가에서 기술의 필요성이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우수관정을 받거나 곧 바로 통과관정을 받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G-7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힌 기업들도 내년도 투자액을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인 실정이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국내 환경관련기술의 발전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

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97년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에 따르면 대기, 수질·수자원, 폐기물, 토양, 지하수, 청정기술 등 모두 9개 분야의 기술수준이 미·일 등 선진 7개국과 비교해 15~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환경부가 실시한 국민제안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폐기물분야는 선진국의 40% 수준이고 수질분야도 45%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낙후된 기술분야는 생태와 환경보건으로 각각 선진국의 15%와 20%밖에 안됐다.

정부는 당초 환경관련분야의 기술수준을 2001년까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1년까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절반을 밀도는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질, 폐기물관련 사업 축소 불가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정부의 내년도 세출예산 중 3조6천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환경부의 내년 사업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국내경제성장률이 3%로 낮아지면서 정부의 세입이 3조 6천

억원가량 감소해 내년도 환경부 예산의 삭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 분야의 사업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수질보전 및 상하수도관리'와 '폐기물관리' 분야에 98년 배정된 예산은 각각 6천3백16억8천4백원(52.8%)과 3천37억3천9백만원(25.4%)으로 환경부 전체세출예산의 78.2%를 차지한다.

이 두 분야의 주요 관련사업은 지방상수도개발 및 개량,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단하폐수처리장 지원과 쓰레기매립지 설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재활용시설 설치 등이다.

이외에도 IMF 자금지원 속에 국내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최소 2~3년이상 걸릴 경우 환경부의 중장기사업계획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사업, 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 대단위 해안매립지확충 등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 등은 사업규모 축소나 기간 연장 등이 예상된다.

98년 환경부 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9천1백52억1천7백만원)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2천1백6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4백55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2백3억9천8백만원) 등 모두 1조1천9백71억1천5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재정경제원에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예산감축 방향은 사업자체의 중단보다는 배정된 예산의 감소와 해당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가다익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온실가스 평균 5.2% 감축 합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3차 교토 당사국 총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 12월 11일 새벽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균 5.2%로 결정하고 개도국의 참여문제는 사제키로 하는 등 극적 합의를 본후 폐막했다.

전세계 1백6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개최된 교토지구온난화방지 총회는 9일 저녁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를 평균 5%로 정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을 완화시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울 에스트라다 의장안을 놓고 이틀동안 격론을 벌인 결과 폐막일을 하루 넘겨 이같이 합의했다.

교토총회는 지난 95년 제1차 베를린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6가지 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로 줄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G-77 그룹 및 중국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당초 선언적인 참여를 검토했으나 해당 항목인 10조(개도국 자발적 참여조항)는 아예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일단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내년 11

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4차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인 '부속서 I' 국가 리스트 개정이 예정돼 있어 미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 참여 압력을 계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비록 이번 협상을 통해 일단 참여압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토 전체회의는 심야 협상을 통해 의견을 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 가스감축에 관한 교토 의정서 최종안을 마련, 총회에 상정해 이를 확정했다.

교토의정서는 협약조약국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대비 55%이상 초과 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와 지구의 친구들, 세계야생기금(WWF)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교토의정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거래로 타결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데다 선진국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틈새'(Loophole) 또한 많으며 비난하고 나섰다.

수돗물 10%이상 절약 강력 추진

환경부는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수돗물 10% 이상 절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13일 환경부가 마련한 내년도 수돗물 10% 절약 방안에 따르면 내년중에 1인당 생활용

수 소비량을 10% 이상 줄이고 아울러 물질약형 사회구조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96년말 현재 15% 수준인 누수율을 내년중에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14%로 낮추고 한번 쓴 수도물을 다시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중수도 설치도 내년에 4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현재 원가대비 77%에 불과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을 내년에 90%로 끌어 올려 수도물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건평 1백㎡이상, 20가구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절수기기 설치도 내년부터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수도물 절약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도물 아껴 쓰기 범국민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또 양변기 물탱크에 1.5l 들이 페트병 넣기 운동과 절수형 수도기기 사용 및 공체 운동 등도 병행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수도물 절약정책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펴기로 했다"면서 "10%가 절약될 경우 생산비용이 연간 3천1백억원이 절감되고 전력사용에 소요되는 외화도 1천4백만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